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활용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고 민 창**

논문초록

본 연구는 재정적자를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재분배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에 기인한 정부부채의 지속적 증가를 우려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균형재정의 조건 하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재량적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다 더 작다. 둘째, 소득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침체주의 가설뿐만 아니라 활황주의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셋째, 균형재정 정책을 실행할 경우 노동소득세율은 더 이상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자본소득세율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균형재정 정책에 의해 자본소득세가 정부지출로서 경제 순환 과정에 주입될 경우 그 주입의 크기는 자본소득세 납부에 의한 소비 감소의 크기보다 더 크므로 균형 재정 정책 하에서 자본소득세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심 주제어: 재정적자,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 재분배정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0, H5

투고 일자: 2016. 7. 11. 심사 및 수정 일자: 2016. 8. 29. 게재 확정 일자: 2016. 10. 17.

* 이 논문은 2016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익명의 심사위원과 자문위원의 유익한 논평으로 논문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mail: mcko@wku.ac.kr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이용하여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Rowthorn(1981), Dutt(1984), Taylor(1985), Amadeo(1986) 등에 의해 발전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은 암묵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옹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의 장기적 효과 분석이나 정부 개입의 유형 분석 등 정부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의 관점에서 정부 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는 You and Dutt(1996), Lavoie(2000), Commendatore et al. (2011), 이상현·고민창(2013) 등이 있다. You and Dutt(1996)은 정부지출의 증가에 기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는 정부부채비율을 상승시키고, 정부부채비율의 상승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자본가들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Lavoie(2000)은 단기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칼레츠키언 모형을 사용하여 정부부채의 증가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정부부채의 증가가 장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현·고민창(2013)은 정부지출 대신 소득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재정정책의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비율 상승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역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거론된 세 연구가 정부지출의 유형별 분류를 행하고 있지 않는 반면, Commendatore et al. (2011)은 정부지출을 ‘생산적’ 지출과 ‘비생산적’ 지출로 유형 분류하고 이들 각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생산적 정부지출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동생산성은 실질임금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고, 실질임금의 노동생산성 탄력성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반영하면서 1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이 연구는 소득대비 정부지출의 크기에 따라 생산적 정부지출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반면, 비생산적 정부지출은 항상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ommendatore et al. (2011)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비생산적 정부지출은 항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적 정부지출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 우리가 생산적 정부지출을 비생산적 정부지출로부터 구별하고 어떤 정부지출이 생산적이 될 것인지 모색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그들의 정부지출의 유형별 분류가 전혀 의미가 없게 된다. 둘째, Commendatore et al. (2011)은 생산적 정부지출과 비생산적 정부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R&D 지출이 생산적 지출에 속하는지 아니면 사회간접자본 지출이 생산적 지출에 속하는지, 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Commendatore et al. (2011)과는 다른 의미에서 정부지출을 유형 분류하고,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활용해 각각의 정부지출 유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지출을 통상적인 정부구매와 이전지출로 구별하고 사회보장지출을 이전지출의 대표적 지출로 간주한다. 아울러 우리는 소득별 소득세율을 구별하고 각각의 소득세율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재분배정책은 각 계층 간 소득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조세와 사회보장지출을 활용하는 정책이기에, 본 연구는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통해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의 지평 확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의 주창자들은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옹호하면서도 정부 활동에 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에서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에 대한 정책적 요구 사항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상헌·고민창, 2010; 이상헌, 2014; 홍장표, 2014; Ko and Lee, 2015).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칼레츠키언 성장분배이론에 대한 최근의 정책 수요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의 제II절에서 우리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한다. 횡단면적인 관점에서 볼 때나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볼 때나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재정적자를 고려한 모형은 현실을 잘 반영하는 모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지출을 정부구매와 사회보장지출로 유형 분류하고,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활용해 각각의 정부지출 유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소득별 세율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제Ⅲ절에서 우리는 균형재정 정책의 조건 하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세계 각국은 재정적자의 증가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를 우려해왔고 정부부채비율의 지속적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최근 들어 균형재정 정책을 추구해오고 있다. 이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 재정과 관련하여 최선의 정책은 균형재정 정책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균형재정 정책의 실행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제Ⅳ절은 본 연구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한다.

II. 재정적자를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

정부부문을 고려한 폐쇄경제를 가정하자.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로 단일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이고, 노동공급 탄력성은 완전탄력적이고 자본은 마모되지 않으며 기업은 과잉 설비의 조건 하에서 생산한다. 경제의 생산기술은 레온티에프 유형의 생산함수에 의해 표현된다.

$$Y = aL \leq \min[a\bar{L}, bK] = \bar{Y} \quad (1)$$

여기서 Y , L , K 는 각각 실제의 산출량, 노동량, 자본스톡을 나타내고, a 와 b 는 각각 노동생산성과 자본계수의 역수이다. \bar{Y} 는 잠재산출량이고 \bar{L} 는 완전고용수준이다.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은 Kalecki(1954)의 마크업 가격결정이론에 기초한다. 마크업 가격결정이론은 오늘날 거대 기업들이 가격결정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독점력을 보유한 거대 기업은 평균가변비용에 이윤 마진을 할증함으로써 재화 가격을 결정한다.

$$p = (1 + m) \frac{\bar{w}}{a} \quad (2)$$

여기서 p 는 재화 가격, ϖ 는 명목임금률, ϖ/a 는 재화 한 단위당 명목임금, m 은 마크업이다. 마크업의 크기는 기업의 독점정도에 의존한다.

식 (2)를 약간 변형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질임금률(w)과 노동생산성(a)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frac{\varpi}{p} = w = \frac{a}{1+m} \quad (3)$$

칼레츠키의 마크업 가격결정이론은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따라 변하지만, 실질임금의 변화량은 노동생산성의 변화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크업 가격결정이론은 임금 몫과 이윤 몫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임금 몫(W/Y)과 이윤 몫(Π/Y)은 다음과 같이 마크업의 크기에 의존한다.

$$\frac{W}{Y} = \frac{wL}{aL} = \frac{w}{a} = \frac{1}{1+m} \quad (4)$$

$$\frac{\Pi}{Y} = \frac{Y-W}{Y} = \frac{a-w}{a} = \frac{m}{1+m} \quad (5)$$

본 연구의 핵심은 재분배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누진세, 실업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의 유형으로서 재분배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에 있다.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지출(G)을 통상적인 정부구매(G_1)와 사회보장지출(G_2)로 구별할 것이다. 사회보장지출은 이전지출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G = G_1 + G_2 \quad (6)$$

우리는 정부구매를 재량적 정부지출로 간주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구매를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지출은 자동안정화¹⁾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지출이 소득에 역진적으로

변동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G_2 = H - \theta Y \quad (7)$$

여기서 $G_2 > 0$ 이 성립한다. H 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출을 나타내고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된다.²⁾ θY 는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인해 경기변동과 연관되어 변동하는 사회보장지출을 나타낸다. θ 는 사회보장지출의 소득 민감도로서 소득 한 단위 변동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변화량을 보여주며 사회보장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의 정도를 반영한다. 즉, θ 가 커질수록 자동안정화 기능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부구매와 사회보장지출을 자본소득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도록 하자.

$$\frac{G_1}{K} = \phi \quad (8)$$

$$\frac{G_2}{K} = \eta - \theta u \quad (9)$$

여기서 u 는 자본소득대비 소득의 비율로서 설비가동률을 나타낸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가정할 것이고, You and Dutt (1996)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오직 차입을 통해서만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elta D = G - T + \frac{iD}{p} \quad (10)$$

위 식은 정부지출(G)과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iD/p)의 합이 세금(T)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수당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경기호황기에는 자동적으로 총지출이 작아지는 반면 경기불황기에는 총지출이 증가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이라고 한다.

2) 본 연구에서 정부지출과 관련된 정책변수는 G_1 과 H 이다.

초과할 경우 정부는 그 초과액만큼 차입(ΔD)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경제의 소비지출을 살펴보자. 노동자들은 저축하지 않으며 정부로부터 이전 지출의 일종인 사회보장지출(G_2)을 제공받는다. 자본가들은 국채를 매입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얻는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경제의 소비지출(C)은 노동자들의 세후 임금소득으로부터의 소비지출, 사회보장소득으로부터의 소비지출, 자본가들의 세후 이윤소득과 이자소득으로부터의 소비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

$$C = (1 - t_w)wL + G_2 + (1 - s)(1 - t_c)(hY + iD/p) \quad (11)$$

여기서 t_w 는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이고 t_c 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다. 그리고 s 는 자본가들의 저축성향이고 h 는 소득대비 이윤 몫이다. D 는 정부부채이고 i 는 이자율이므로 iD/p 는 정부의 부채에 대한 실질이자지급액으로서 자본가들의 실질 이자소득이 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이윤 몫(h), 이자율(i), 가격(p)이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를 가정하자. 즉, 자본축적률(I/K)은 설비가동률(u)의 증가함수로 설정된다.

$$\frac{I}{K} = g = \alpha + \beta u \quad (12)$$

설비가동률 u 는 자본소득대비 소득의 비율(Y/K)³⁾이므로 자본축적률 g 는 설비가동률이 일정한 균제상태에서 소득성장률과 일치한다. α 는 설비가동률과는 독립적으로 투자지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를 들어, 기업가들의 투자 본능(animal spirits))을 반영하는 파라미터이고 β 는 투자의 설비가동률 민감도를 나타낸다.

거시경제 균형은 소득이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구매의 합과 일치할 때 달성된다.

3) 원래 설비가동률의 엄밀한 정의는 잠재산출량대비 산출량의 비율(Y/\bar{Y})이다. 그러나 $Y/\bar{Y} = (K/\bar{Y})(Y/K)$ 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본계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설비가동률(Y/\bar{Y})은 Y/K 에 의해 반영된다.

$$Y = (1 - t_w)wL + G_2 + (1 - s)(1 - t_c)(hY + iD/p) + (\alpha + \beta u)K + G_1 \quad (13)$$

사회보장지출 G_2 를 $H - \theta Y$ 으로 대체하고 통상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식 (13)을 자본스톡의 비율로 나타내면 우리는 다음의 식을 얻는다.

$$u = (1 - t_w)(u - hu) + \eta - \theta u + (1 - s)(1 - t_c)(hu + i\delta) + \alpha + \beta u + \phi \quad (14)$$

여기서 δ 는 자본스톡대비 정부부채 비율(D/pK)이다. $wL = Y - hY$ 이므로 총 임금(wL)을 자본스톡의 비율로 나타낼 경우 $u - hu$ 이 된다. 식 (14)를 정리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균형실비가동률(u^*)을 얻을 수 있다.

$$u^* = \frac{\alpha + \phi + \eta + (1 - s)(1 - t_c)i\delta}{t_w(1 - h) + sh + t_ch(1 - s) + \theta - \beta} \quad (15)$$

식 (15)의 분모는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을 나타낸다.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이란 산출 변동에 따른 저축의 변화가 산출 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화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⁴⁾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식 (15)의 분모는 양의 값을 갖는다. 식 (15)의 분자 또한 양수이기 때문에 균형실비가동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균형실비가동률을 자본축적률 식 (12)에 대입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균형 성장률(g^*)을 얻을 수 있다.

$$g^* = \frac{\alpha\theta + \alpha sh + \beta\phi + \beta\eta + \alpha t_w(1 - h) + \alpha t_ch(1 - s) + \beta(1 - s)(1 - t_c)i\delta}{t_w(1 - h) + sh + t_ch(1 - s) + \theta - \beta} \quad (16)$$

식 (16)의 분자 항은 양수이다. 따라서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

4) 정부부문을 고려한 폐쇄경제모형에서 경제의 총저축은 $Y - C - G_1$ 이므로 식 (15)의 분모 항 $t_w(1 - h) + sh + t_ch(1 - s) + \theta$ 은 산출 변동에 따른 총저축의 변화를 보여준다.

할 때 균형성장률 또한 양의 값을 갖는다.

이제 비교정태분석을 살펴보자. 균형설비가동률에 대한 각각의 파라미터의 비교 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u_{\alpha}^* > 0, u_{\beta}^* > 0, u_{\phi}^* > 0, u_{\eta}^* > 0, u_{\theta}^* < 0, u_{t_w}^* < 0, u_{t_c}^* < 0, u_s^* < 0, \\
 &u_i^* > 0, u_{\delta}^* > 0
 \end{aligned}$$

$u_{\alpha}^* > 0, u_{\beta}^* > 0, u_{\phi}^* > 0, u_s^* < 0$ 는 기존의 칼레츠키언 문헌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결과이다. 기업가들의 투자 욕구가 크거나 투자의 설비가동률 민감도가 클수록 균형설비가동률이 상승한다($u_{\alpha}^* > 0, u_{\beta}^* > 0$). 또한 정부구매가 클수록 균형설비가동률은 상승한다($u_{\phi}^* > 0$). 그리고 저축성향이 클수록 균형설비가동률이 하락한다는 절약의 역설이 성립한다($u_s^* < 0$). 한편, 각각의 소득세율이 상승할수록 균형 설비가동률이 하락한다는 결과($u_{t_w}^* < 0, u_{t_c}^* < 0$) 또한 기존의 경제학 상식에 배치 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결과 중의 하나는 사회보장지출과 관련된 비교정태분석 결과이다. 전통적인 케인지언 경제학에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가 정부구매의 승수효과보다 작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정부구매가 직접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반면, 이전지출은 소득재분배에 따라 간접적으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들만 사회보장지출을 얻고 노동자들은 그 사회보장소득을 전액 소비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지출 유형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차이는 없게 된다. 즉, 정부구매의 증가든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든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정확히 같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구매의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다르게 된다. 사회보장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출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u_{\eta}^* = \frac{1}{t_w(1-h) + sh + t_c h(1-s) + \theta - \beta} > 0 \tag{17}$$

사회보장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없다면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출이 설비가동률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구매가 설비가동률에 미치는 효과 (u_θ^*)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출의 확대는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을 더 작게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설비가동률에 미치는 효과 또한 식 (17)보다 더 작게 된다.⁵⁾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출의 확대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분배 형평성의 증진 등의 고유의 목적을 갖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제적 효과만 가지고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보장지출의 소득 민감도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u_\theta^* = \frac{-[\alpha + \phi + \eta + (1-s)(1-t_c)i\delta]}{[t_w(1-h) + sh + t_ch(1-s) + \theta - \beta]^2} < 0 \quad (18)$$

사회보장지출의 소득 민감도가 커질수록, 즉 사회보장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강화될수록 설비가동률은 하락한다.

한편, 위의 비교정태분석 결과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논해야 할 것은 u_h^* 이다. 즉, 이윤 몫의 증가에 따라 경기 불황(침체주의 가설)이 유발되는지, 아니면 경기 호황(활황주의 가설)이 발생하는지 상론할 필요가 있다. 균형설비가동률에 대한 이윤 몫의 편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u_h^* = \frac{[(t_w - t_c) - s(1-t_c)][\alpha + \phi + \eta + (1-s)(1-t_c)i\delta]}{[t_w(1-h) + sh + t_ch(1-s) + \theta - \beta]^2} \quad (19)$$

식 (19)의 분모는 양수이지만 분자 항의 부호는 확정될 수 없다. 식 (19)의 부호는 분자에서 첫 번째 항인 $[(t_w - t_c) - s(1-t_c)]$ 의 부호에 의존한다. 자본소득세율

5) 이는 사회보장지출 식 (7)을 전미분해서 얻어지는 식 $dG_2/dH = 1 - Yd\theta/dH - \theta dY/dH$ 을 통해 알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출의 한 단위 증가는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을 한 단위보다 더 작게 증가시킨다.

과 노동소득세율, 자본가들의 저축성향의 크기에 따라 침체주의 가설이 성립하는지 활황주의 가설이 성립하는지 결정된다. 노동소득세율이 자본소득세율보다 훨씬 크고 저축성향이 작을 경우 활황주의 가설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소득세율이 노동소득세율보다 클 경우, 즉 $t_c > t_w$ 이 성립할 경우 본 연구는 침체주의 가설을 지지한다. $t_c > t_w$ 은 침체주의 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에 대한 경제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t_w - t_c) - s(1 - t_c)]$ 은 이윤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소비지출의 변화량을 나타낸다.⁶⁾ 만약 $t_c > t_w$ 이 성립할 경우, 이윤 몫이 커질수록 세금으로 누출되는 크기도 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소비지출은 더 감소하게 되어 경기는 침체하게 된다.

이제 균형성장률에 대한 각각의 파라미터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g_\alpha^* > 0, g_\beta^* > 0, g_\phi^* > 0, g_\eta^* > 0, g_\theta^* < 0, g_{t_w}^* < 0, g_{t_c}^* < 0, g_s^* < 0, g_i^* > 0, g_\delta^* > 0$$

균형성장률에 대한 각각의 파라미터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균형설비가동률에 대한 비교정태분석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결과($u_i^* > 0, g_i^* > 0$)와 자본소득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결과($u_\delta^* > 0, g_\delta^* > 0$)는 You and Dutt(1996)과 Lavoie(2000)에 의해 도출된 결과와 일치한다.⁷⁾ 이에 대한 경제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정부부채비율

6) 식 (11)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C = [(t_w - t_c) - s(1 - t_c)]hY + (1 - t_w - \theta)Y + H + (1 - s)(1 - t_c)iD/p$.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t_w - t_c) - s(1 - t_c)]$ 은 이윤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소비지출의 변화량을 보여준다.

7) You and Dutt(1996)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최초로 제시한 연구이다. 정부부채를 고려한 선구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는 많은 추가적인 논의를 유발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장기에도 정부부채 비율과 경제성장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기존의 경제학 상식에 배치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상승할 경우 정부로부터 얻는 자본가들의 이자소득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 지출의 증가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현·고민창(2013)은 재정정책의 지표로서 소득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사용하고, 이를 정부부채 동학과 결합시킴으로써 장기에 정부부채비율은 경제성장과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둘째, 균형설비가동률에 대한 이윤 몫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균형성장률에 대한 이윤 몫의 비교정태분석 결과 또한 확정적이지 않다. 균형성장률에 대한 이윤 몫의 편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g_h^* = \frac{[(t_w - t_c) - s(1 - t_c)][\alpha\beta + \beta\phi + \beta\eta + \beta(1 - s)(1 - t_c)i\delta]}{[t_w(1 - h) + sh + t_ch(1 - s) + \theta - \beta]^2} \quad (20)$$

식 (20)의 부호는 식 (19)와 마찬가지로 분자 항의 $[(t_w - t_c) - s(1 - t_c)]$ 의 부호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본소득세율과 노동소득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임금주도 성장레짐이 성립하는지 이윤주도 성장레짐이 성립하는지 결정된다. 자본소득세율이 노동소득세율보다 크다는 조건은 임금주도 성장레짐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Rowthorn(1981), Dutt(1984), Taylor(1985) 등은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통해 임금주도 성장레짐을 제시하였지만, Bhaduri and Marglin(1990)은 투자함수의 수정을 통해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틀 내에서 임금주도 성장레짐과 이윤주도 성장레짐이 양립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한편, Blecker(2002)는 임금에서의 저축을 가정할 경우에도 이윤 몫의 변화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⁸⁾ 본 연구는 경제가 어떤 조세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윤 몫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고, 이는 본 연구의 독창적인 기여이다.

8) 고민창(2016)은 임금에서의 저축과 노동자의 저축이 동일한 가정이 될 수 없고, 임금에서의 저축 가정은 장기에 노동자들이 모든 자본을 소유하게 될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저축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민창(2016)은 노동자의 저축을 가정할 때 이윤 몫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고 촉진될 수도 있다는 사실, 즉 임금주도 성장레짐과 이윤주도 성장레짐이 양립 가능함을 보였다.

III. 균형재정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확장적 재정정책 혹은 재정적자 확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류경제학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Elmendorf and Mankiw, 1999). 첫째, 재정적자의 증가에 따른 정부 차입의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의 투자지출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의 차입 증가는 장기에 정부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미래 예산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⁹⁾ 둘째, 리카디언 동등성정리에 입각한 주장이다. 재정적자는 정부부채를 증가시키고,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정부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결국 조세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조세 부담 증가에 대비해 현재 지출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기초한 정부의 지출 증가는 민간의 지출 감소에 의해 정확히 상쇄됨으로써 재정적자 확대 정책은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주류경제학자들의 다수는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며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으로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인한 정부부채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박을 크게 함으로써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의 입장에 따르면 균형재정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된다.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입장을 쫓아 세계 각국은 균형재정 정책을 추구해왔다.¹⁰⁾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균형재정 정책의 조건 하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 하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후에 통합재정수지 균형 정책 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1.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을 행하는 것이다.

9) 최근 Reinhart and Rogoff (2010)는 44개 국가의 200년간의 방대한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정부부채비율이 90%가 넘을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제II절의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에서 정부가 취득하는 세금(T)은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합이다.

$$T = t_w wL + t_c (hY + iD/p) \quad (21)$$

식 (21)을 자본스톡의 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K = t_w (u - hu) + t_c (hu + i\delta) \quad (22)$$

우리는 여기서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G = T$ 을 가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 절의 거시경제 균형조건 식 (13)에 $G_1 + G_2$ 대신 T 를 대입하고 이를 자본스톡의 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u = (1 - t_w)(u - hu) + (1 - s)(1 - t_c)(hu + i\delta) + \alpha + \beta u + t_w (u - hu) + t_c (hu + i\delta) \quad (23)$$

식 (23)으로부터 우리는 균형설비가동률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자본축적률 식 (12)에 대입함으로써 균형성장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u^* = \frac{\alpha + (1 - s + st_c)i\delta}{sh(1 - t_c) - \beta} \quad (24)$$

$$g^* = \frac{\alpha sh(1 - t_c) + \beta(1 - s + st_c)i\delta}{sh(1 - t_c) - \beta} \quad (25)$$

식 (24)와 (25)의 분모는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을 나타낸다. 우리는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sh(1 - t_c) - \beta > 0$ 이 성립한다. 식 (24)와 (25)의 분자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으로 인해 정부지출은 정확히 세금의 크기만큼만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노동소득세율(t_w)은 더 이상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자본소득세율(t_c)만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 균제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저축성향이 이윤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자본가들의 저축성향만이 이윤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케임브리지방정식의 이론적 함의를 연상시킨다.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가정할 때 노동소득세율이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식 (11)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노동소득세율만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난 나머지 소득 전체를 소비지출에 사용한다. 즉,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세는 정부에 의해 경제 순환 과정에서 누출로 빠져나오게 되고 노동자들은 정확히 그 만큼 더 적게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소득세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에 의해 노동소득세는 정부지출로서 다시 경제순환과정에 주입된다.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에 의한 정부의 노동소득세의 주입은 애초의 노동소득세만큼 감소된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노동소득세율이 얼마이든지 간에 경제 전체의 유효수요의 크기는 변화가 없게 되고 노동소득세는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본소득세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자본가들은 자본소득세만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후 가처분소득에서 일정 부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즉, 자본가들은 저축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세 납부로 인한 소비지출의 감소 크기는 자본소득세 감소보다 더 작게 된다. 따라서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에 의해 자본소득세가 정부지출로서 경제 순환 과정에 주입될 경우 그 주입의 크기는 자본소득세 납부에 의한 소비 감소의 크기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자본소득세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의 하나이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에 대한 각각의 파라미터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u_{\alpha}^* > 0, u_{\beta}^* > 0, u_{t_c}^* > 0, u_h^* < 0, u_s^* < 0, u_i^* > 0, u_{\delta}^* > 0$$

$$g_{\alpha}^* > 0, g_{\beta}^* > 0, g_{t_c}^* > 0, g_h^* < 0, g_s^* < 0, g_i^* > 0, g_{\delta}^* > 0$$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에 대한 각각의 파라미터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정확히 일치한다. 11) 비교정태분석 결과, 정부가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을 추구할 경우 자본소득세율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u_{t_c}^* > 0, g_{t_c}^* > 0$)이 입증된다. 그 경제적 근거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에 의한 자본소득세 주입의 크기가 자본소득세 납부로 인한 자본가들의 소비 감소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의 투자 욕구와 투자의 설비가동률 민감도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u_{\alpha}^* > 0, u_{\beta}^* > 0; g_{\alpha}^* > 0, g_{\beta}^* > 0$)과 저축성향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u_s^* < 0; g_s^* < 0$)은 제II절의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II절의 분석에서는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침체주의 가설과 활황주의 가설이 양립 가능하였던 반면, 기초재정수지 균형 조건 하에서 경제는 침체주의 가설과 임금주도 성장체제를 지지한다. 즉, 이윤 몫이 커질수록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이 하락한다($u_h^* < 0, g_h^* < 0$).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으로 인해 노동소득세율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식 (23)을 조정할 경우, 우리는 $u = u - hu + (1 - s + st_c)(hu + i\delta) + \alpha + \beta u$ 을 얻는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으로 노동소득세율은 설비가동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윤 몫의 상승은 자본가들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지만 임금 몫을 감소시키고

11) 비교정태분석 결과 $g_s^* < 0$ 와 $g_{t_c}^* > 0$ 에 대해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균형성장률에 대한 저축성향의 편도함수는 $g_s^* = \frac{-\beta(1-t_c)(\alpha h - \beta i \delta) - \beta h(1-t_c)i\delta}{[sh(1-t_c) - \beta]^2}$ 이고, 균형성장률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의 편도함수는 $g_{t_c}^* = \frac{\beta s[(\alpha h - \beta i \delta) + hi\delta]}{[sh(1-t_c) - \beta]^2}$ 이다. $g_s^* < 0$ 와 $g_{t_c}^* > 0$ 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alpha h - \beta i \delta > 0$ 이다. 제III절 제2항에서 볼 수 있듯이, 균형성장률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alpha h - \beta i \delta > 0$ 이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g_s^* < 0$ 와 $g_{t_c}^* > 0$ 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을 더 크게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윤 몫의 상승은 소비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통합재정수지 균형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앞의 제1항에서 우리는 기초재정수지 균형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제 통합재정수지 균형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자. 통합재정수지란 정부지출과 세입뿐만 아니라 정부부채에 대한 정부의 이자지급까지 포함한 재정수지를 뜻한다. 만약 정부가 현재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기초재정수지 균형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통합재정수지 균형이 더욱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 균형이란 정부의 새로운 차입이 없다는 것으로서 $\Delta D = 0$ 을 의미한다. 그리고 $\Delta D = 0$ 은 통합재정수지를 나타내는 식 (10)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G = T - \frac{iD}{p} \quad (26)$$

이를 자본스톡의 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G/K = T/K - iD/pK = t_w(u - hu) + t_c(hu + i\delta) - i\delta \quad (27)$$

식 (26)을 거시경제 균형조건 식 (13)에 대입하고 이를 자본스톡의 비율로 나타내면 우리는 다음의 식을 얻는다.

$$\begin{aligned} u &= (1 - t_w)(u - hu) + (1 - s)(1 - t_c)(hu + i\delta) \\ &\quad + \alpha + \beta u + t_w(u - hu) + t_c(hu + i\delta) - i\delta \end{aligned} \quad (28)$$

식 (28)로부터 우리는 균형실비가동률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자본축적률 식 (12)에 대입함으로써 균형성장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균형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u^* = \frac{\alpha - s(1 - t_c)i\delta}{sh(1 - t_c) - \beta} \tag{29}$$

$$g^* = \frac{\alpha sh(1 - t_c) - \beta s(1 - t_c)i\delta}{sh(1 - t_c) - \beta} \tag{30}$$

앞의 제1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식 (29)와 (30)의 분모는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을 나타낸다. 우리는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sh(1 - t_c) - \beta > 0$ 이 성립한다.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식 (29)와 (30)의 분자가 모두 양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alpha - s(1 - t_c)i\delta > 0$ 와 $\alpha h - \beta i\delta > 0$ 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앞의 제1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동소득세율은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자본소득세율만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에 대한 각각의 파라미터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u_\alpha^* > 0, u_\beta^* > 0, u_{t_c}^* > 0, u_h^* < 0, u_s^* < 0, u_i^* < 0, u_\delta^* < 0$$

$$g_\alpha^* > 0, g_\beta^* > 0, g_{t_c}^* > 0, g_h^* < 0, g_s^* < 0, g_i^* < 0, g_\delta^* < 0$$

$u_i^* < 0, u_\delta^* < 0, g_i^* < 0, g_\delta^* < 0$ 를 제외한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앞의 제1항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제II절과 제III절 제1항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서 기존의 경제학 상식에 배치되는 결과는 $u_i^* > 0, u_\delta^* > 0, g_i^* > 0, g_\delta^* > 0$ 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가능한 것은 이자율과 정부부채비율의 상승에 따라 자본가들이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이자소득을 얻게 되고, 이러한 이자소득의 증가는 소비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 균형 정책을 가정할 경우 이자율과 정부부채비율의 상승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통합재정수지 균형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T - iD/p$ 의 크기만큼 정부지출의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금으로부터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

급을 제한 크기가 정부지출로서 경제 순환 과정에 주입된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 균형 정책 하에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증가는 그만큼 정부지출을 감소시킨다. 통합재정수지 균형 정책에 의한 이자지급액의 누출은 자본가들의 이자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과 정부부채비율의 상승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재분배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부채의 지속적 증가를 우려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균형재정 조건 하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재정적자를 갖는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회보장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출의 확대는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을 더 작게 증가시키고, 따라서 정부구매의 확대보다 설비가동률을 더 작게 상승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출의 확대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분배 형평성의 증진 등의 고유의 목적을 갖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제적 효과만 가지고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Bhaduri and Marglin (1990) 처럼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침체주의 가설뿐만 아니라 활황주의 가설이 성립할 수도 있음을 보였다.

한편, 균형재정을 가정한 모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균형재정 정책을 실행할 경우 노동소득세율은 더 이상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자본소득세율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균형재정 정책에 의해 자본소득세가 정부지출로서 경제 순환 과정에 주입될 경우 그 주입의 크기는 자본소득세 납부에 따른 소비 감소의 크기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균형재정 정책 하에서 자본소득세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균형재정 정책의 결과 노동소득세율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윤 몫의 증가는 자본

가들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지만 임금 몫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을 더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균형재정 정책 하에서 경제는 임금주도 성장레짐의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하나를 고려해보자. 우리는 제Ⅲ절에서 균형재정 정책을 가정하고 이 가정 하에서 자본소득세율의 인상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적 성과를 위해 자본소득세율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본소득세율은 이윤소득과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율로서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형태로 부과된다. 즉, 이윤소득과 이자소득을 얻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로 자본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로 자본소득세를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종합소득세율이 평균 법인세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더 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부채의 증가를 우려하여 균형재정 정책을 실행할 경우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는 자본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며, 그 때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율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장은 법인세율의 인상이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퇴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널리 퍼진 주류경제학의 견해와 대립한다.

■ 참고 문헌

1. 고민창,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내생화폐의 역할,” 『사회경제평론』, 제50호, 2016, pp.1-24.
(Translated in English) Ko, Min-Chang, “The Theoretical Roles of Endogenous Money in the Post Keynesian Models of Growth and Distribution,”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 No. 50, 2016, pp.1-24.
2. 이상헌,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제43호, 2014, pp.67-98.
(Translated in English) Lee, Sangheon, “Income-led Growth: Theoretical Potentials and Policy Implications,”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 No. 43, 2014, pp.67-98.

3. 이상현 · 고민창, “Kaldor 유형의 거시동학모형: 기업부채와 자본축적의 동태적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8집 제2호, 2010, pp. 37-64.
(Translated in English) Lee, Sangheon and Min-Chang Ko, “A Kaldorian Macrodynamic Model of Debt, Finance, and Growth,”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58, No. 2, 2010, pp. 37-64.
4. _____, “임금주도 성장분배모형에서 재정-금융정책의 장기적 효과,”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2호, 2013, pp.190-217.
(Translated in English) Lee, Sangheon and Min-Chang Ko, “Government Debt, Sequester and Long-period Stability - A Post Keynesian Analysis of Wage-led Growth Economy,” *Marxism 21*, Vol. 10, No. 2, 2013, pp.190-217.
5. 홍장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금주도 성장모델의 적용 가능성,” 『사회경제평론』, 제43호, 2014, pp.101-138.
(Translated in English) Hong, Jang-Pyo,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Labor Share of Income on the Aggregate Demand in Korea: Application for Wage-led Growth Model,”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 No. 43, 2014, pp.101-138.
6. Amadeo, E. J., “The Role of Capacity Utilization in Long-Period Analysis,” *Political Economy*, Vol. 2, 1986, pp.147-160.
7. Bhaduri, A. and S. Marglin,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4, 1990, pp.375-393.
8. Blecker, R. A., “Distribution, Demand and Growth in Neo-Kaleckian Macro-Models,” in Setterfield, M. (ed.): *The Economics of Demand-led Growth*, Edward Elgar, Cheltenham, 2002, pp.129-152.
9. Commendatore, P., Panico, C. and A. Pinto, “The Influence of Different Forms of Government Spending on Distribution and Growth,” *Metroeconomica*, Vol. 62, 2011, pp.1-23.
10. Dutt, A., “Stagn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Monopoly Power,”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8, 1984, pp.25-40.
11. Elmendorf, D. W. and N. G. Mankiw, “Government Debt,” in Taylor, J. B. and M. Woodford (eds.): *Handbook of Macroeconomics 1C*, North-Holland, Amsterdam, 1999, pp.1615-1669.
12. Kalecki, M., *Theory of Economic Dynamics*, Allen & Unwin, London, 1954.
13. Ko, M.-C. and S.H. Lee, “Corporate Debt Dynamics, Capital Accumulation,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A Post-Keynesian Analysi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31, 2015, pp.177-197.
14. Lavoie, M., “Government Deficits in Simple Kaleckian Models,” in Bougrine, H. (ed.): *The Economics of Public Spending: Debts, Deficits and Economic Performance*, Elgar, Aldershot, 2000, pp.122-134.
15. Reinahrt, C. M. and K. S. Rogoff, “Growth in a Time of Deb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0, 2010, pp.573-578.
16. Rowthorn, B., “Demand, Real Wages and Economic Growth,” *Thames Papers in Political*

Economy, Autumn, 1981, pp.1-39.

17. Taylor, L., "A Stagnationist Model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9, 1985, pp. 383-403.
18. You, J.-I. and A. K. Dutt, "Government Debt,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0, 1996, pp. 335-351.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Redistributive Policy in the Kaleck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Min-Chang Ko**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Kaleck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with budget deficits and examines the effects of redistributive policy on the economy. Furthermore, it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redistributive policy under the assumption of balanced budget. The important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spending for social security has smaller effects on the economy than those of discretionary government purchase because of its role of automatic stabilizer. Second, the exhilarationist regime as well as the stagnationist regime can emerge depending on the relative size of the tax rates for wage and capital income. Third, the tax rate for wage income has no effect on the economy and only the tax rate for capital income has an impact on the economy, when the government pursues balanced budget. This result is reminiscent of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e Cambridge equation that workers' propensity to save does not affect the profit rate in the steady state, while capitalists' propensity to save only influences the profit rate. Lastly, the tax rate for the capital income exert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conomy under the assumption of balanced budget, since the de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due to the payment of the capital income tax is smaller than the leakage of the capital income tax, which is again injected into the circular flow of the economic system as a component of government expenditure.

Key Words: budget deficits, Kaleck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redistributive policy

JEL Classification: E0, H5

Received: July 11, 2016. Revised: Aug. 29, 2016. Accepted: Oct. 17, 2016.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6. We thank anonymous referees for their valuable comments, which helped us to improve the manuscript.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Economics,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Jeonbuk 54538, Korea, Phone: +82-63-850-6413, e-mail: mcko@wku.ac.kr